

데스크 시각

‘혁명의 기억’



홍행기 사회부장

한국은 지금 혁명(革命) 중이다. 주말인 지난 7일 광주 금남로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또다시 촛불 집회가 열렸다. 지난해 10월 29일 주말 촛불 집회가 시작된 이후 이번이 벌써 열 한 번째다. 집회 누적 참석자는 이미 1000만 명을 넘어섰다.

“대통령 비선 실세 국정 농단”을 저지하기 위해 시작된 촛불 집회가 75일 만에 ‘촛불 혁명’으로 번지면서 한국사회의 ‘구체제’는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성난 국민, 놀라 움츠러든 기득권층, 수세 속에 대안책을 모색하는 정부 권력 사이에 벌어지는 격전을 보고 있노라면 프랑스의 구체제, ‘앙시앵 레짐’(Ancient Regime)의 종언을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잘 알려져 있듯, 혁명 이전의 프랑스는 절대군주 국가였다. ‘신으로부터 왕권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하는 이들 군주가 소수의 성직자·귀족들과 결합해 인구의 90%를 차지하는 시민을 억압하고 특권을 누렸던 것이 바로 프랑스의 앙시앵 레짐이다.

앙시앵 레짐의 종언

이 앙시앵 레짐을 무너뜨린 프랑스혁명이 ‘소수 특권층에 대한 다수 시민의 불만’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득권과 엘리트 계층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볼 때, ‘한국 사회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프랑스혁명이 1793년 프랑스 왕 루이16세의 길로틴 처형으로 정점을 찍었듯, 우리의 촛불 혁명 역시 대통령 하야와 권력 교체로 대단원의 막을 내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서다.

하지만 문제는 촛불혁명 이후다. 민중의 힘에 의해 권력 구조와 사회 시스템이 잠시 바뀌더라도 부와 권력을 움켜쥔 기득권 세력들이 국가를 또다시 앙시앵 레짐으로 되돌려 놓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지속적이고 발전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정치·사회 구조를 만들어 내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또다시 거론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한마디로 ‘특혜 받은 사람들의 책임’이다. 옥스포드 영어 사전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해 ‘특혜는 책임을 수반한다’(Privilege entails responsibility)라고 정의하고 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핵심은 책임과 희생이다. 중세 이후 서양의 수많은 권력자가 전장에서 앞장서다 목숨을 잃었고, 국가적 위기에서 막대한 재산을 내놓으며 희생과 배려를 실천해 왔다.

하지만 역사를 돌아볼 때 자발적인 희생은 결코 아니었다. 엄청난 재물과 권력을 자신의 의지로 가까이 포기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욕심에 지나지 않는다.

‘촛불’이 요구하는 것

오히려 루이 16세처럼 국민의 뜻을 거역하다 처형되는 비참한 운명을 피하기 위해 ‘차라리 먼저 책임지고 희생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타당할 것이다. 전체 기득권층의 특혜를 지키기 위한 ‘그들만의 수단’일 수도 있겠지만,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희생’이 있어야만 가족과 가문의 기득권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 알게 됐을 것이다.

요즘 우리 국민은 베일 속에 감춰져 있

던 권력의 속살을 새로이 접하고 있다. 국회 청문회장에는 권력 실세들이 매일 같이 얼굴을 드러내고 있다. 거대 재벌 기업의 총수들도 하루가 멀다고 언론에 등장한다. 온갖 권력과 특혜를 누리던 그들은 그러나 하나같이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만 되풀이하며 국민을 상대로 줄다리를 하고 있다. 그런 그들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지금 한국은 안팎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국내 정치는 멈춰 있고 경제는 악화 일로다. 일본·중국·미국에 치어 외교적으로도 고립무원이다. 그런데도 이 위기를 앞장서 헤쳐 가야 할 권력자·엘리트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촛불을 든 국민은 지금 그들에게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누려 온 것을 용인해 준 국민에게 진실을 보여 줄 것을, 나라를 올바르게 세우는 데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촛불 혁명을 통해 뇌리에 ‘혁명의 기억’을 깊숙이 새기는 중이다. 헌법 제1조처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확인하고, 이제 그 힘을 행사하고 있는 중이다. 혁명이 완수되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망각한 기득권 세력들을 기다리는 것은 ‘공공의 적’이라는 오명과 질타·치욕뿐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기나 할까.

은펜칼럼

불확실한 미·중 갈등 속에 낀 한국



김병인 서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예상치 못하게 트럼프가 당선돼 불확실성이 증대함에 따라 금융시장이 출렁거렸고, 미·중 관계도 흔들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6일 미국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 검토위원회가 중국 국영 기업들의 미국 기업 인수 활동이 금지돼야 한다는 권고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위원회는 “중국 국영 기업이 미국 기업을 인수하거나 지배 지분을 획득할 때마다 발생하는 본질적 위험이 있다”며 “인수를 통해 얻은 기술, 정보, 시장 지배력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치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 자금을

지원받는 중국 기업들은 미국 기술 자산을 인수하기 위한 입찰 활동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미국은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무역과 투자장벽을 허물라는 등 고도의 개방경제를 주장하다, 갑자기 이체와서 중국 기업의 미국 기업 인수를 격정하고 심지어 법까지 개정하면서 중국 국영기업의 미국 기업 인수를 막느냐며 반발하고 나섰다.

2010년 중국의 지리(吉利)자동차 회사가 불보자동차의 전체 주식을 사들인 이후 중국 기업의 해외투자는 급증하기 시작했다. 2014년에는 중국의 해외 직접투자액이 1000억 달러를 넘어 1029억 달러에 달했고,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중국이 투자를 받는 나라에서 세계를 향해 투자하는 나라로 변신하고 있는 것이다.

1980년대에는 중국 기업들이 무력으로 세계를 누렸다면 현재는 훨씬 더 많은 자본이 세계를 향하고 있다. 제조업 중심의 중국 경제가 자본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말은 절대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이 점이 신상태(新常態)의 중국 경제의

특징이다.

그러나 중국 기업들이 빈번하게 해외에 자본을 투자하다 보니 적지 않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어떻게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고 사들인 기업을 잘 운영하나가 중국 기업들이 직면한 새로운 문제이다.

2012년 중국 기계제조업 회사인 삼일 그룹(三一集團)이 미국 오리건주의 롤스(Rails)회사의 풍력발전 시설을 사들이자 미국 외국투자위원회(CFIUS)가 미국 국가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제재하고 나섰다. 오바마까지 나서서 롤스회사는 미연방법원에 미국 외국투자위원회와 오바마 대통령을 상대로 상소했다. 결국 2015년 11월에 승소하여 양측이 화해하고 소를 취하하였다.

이후로도 미국이 국가 안전을 이유로 중국 기업의 미국 진출을 막은 예는 대단히 많다. 미국 의회도 국가 통신 안전을 이유로 들어 화웨이, 중성도의 미국 ICT(정보통신기술)시장 진출을 막았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 기업의 관리 감독이 매우 불공평하다고 주장한다. 이론적으로는 모든 기업에 공평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 기업에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고 주장한다.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 정서와 경제문제를 정치화하는 경향도 상존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속적으로 중국의 수출을 감독하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고 있고 미국의 의회는 중국을 견제하는 보호무역주의 법안을 만들어 중국의 환율, 지적재산권, 무역불균형을 문제삼고 있다.

미국이 제재를 가하면 중국도 보복할 것이다. 당장 콩과 옥수수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하고 아이론 판매도 경고하고 있다. 항공기 수입도 보잉에서 유럽의 에어버스로 바꾼다고 협박한다.

문제는 우리나라다. 우리는 이미 외교나 통상 문제에 있어서 사면초가에 처해 있다. 미국과는 보호무역 갈등, 중국과는 사드 문제로 충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양국의 갈등으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리에게도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크다. 미·중 관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칼럼’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 고

우치동물원 ‘생태·휴식·교육’ 동물원을 꿈꾸다



김정남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수의사

훗카이도는 일본 최북단이라서 겨울이면 영하 20도 이하로 기온이 푹 떨어지는 곳이다. 인구 30여만명에 불과한 중소도시로 그다지 유명세를 떨치는 도시는 아니었는데 아사히카와에 있는 ‘아사히야마 동물원’ 덕분에 최근 세계적인 명소로 주목을 받고 있다. ‘아사히야마 동물원’은 지난 1967년에 개장하여 별 특징이 없다 보니 관람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6년에 시 의회까지 나서 폐쇄를 검토했던 동물원이었다.

하지만 ‘고스게마사오’라는 원장이 동물원 혁신을 위해 사육사들이 참여한 학습 동아리를 운영하는 등 동물생태를 연구하여 창의적인 전시방법을 도입하는 등 새롭게 변화를 시켰다. 동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자연스러운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는 많은 비용과 관리에 어려움이 뒤따른다. 시민관람 성숙도와 경제성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밖에 없다. 4가지 요소중 어떤 요소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동물사를 신축하느냐에 따라 동물의 생활환경과 관람객의 관람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치동물원은 1992년 개장 이래 노후 환경으로 인해 관람객들에게 오랜 시간 외면 받아 온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150억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생태와 동물복지를 실현하는 우치동물원 개선’ 로드맵을 추진하면서 우치동물원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최근 우치공원홈페이지를 개선하여 사육사들이 직접 경험한 생생한 현장 이야기들을 매달 ‘동물원 에피소드’와 ‘이달의 동물’ 코너에 재미있게 실고 있다.

또한 동물원 발전방향에 대한 외부 자문 및 야생동물전문가를 초빙하여 동물원 직원 역량 강화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동물복지팀도 신설하고 경력 있는 젊은 사육사 4명을 증원했다.

최근 자연 서식지 환경과 비슷하고 동물복지를 구현하는 동물사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동물행동풍부화(Animal Behavioral Enrichment)프로그램을 적용한 원숭이사육도 신축했다.

특히 펠린과 볼개 해엄치는 모습을 입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수족관 형태의 해양동물사 리모넬링공사를 착공하여 생태동물원 조성에 힘쓰고 있다. 어린이를 위한 포드존과 그네와, 평상, 해먹, 피크니 테이블, 관람데크 등 조경·휴양·편의시설을 새롭게 설치하여 이동약자가 편안하게 동물원을 관람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생태학습 프로그램인 ‘사육사와 먹이주기 체험’, ‘생태해설사와 동물원 체험’, ‘직업 탐방교실’, ‘야생동물생태교실’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동물원 정문에 홍보관을 설치, 야생동물의 생태와 습성 등에 대해 시민들에게 쉽게 알려주는 교육동물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계속 힘쓰고 있다.

이에따라 관람객 수도 과거 하루 평균 685명에서 최근 1377명으로 2배 가량 꾸준히 늘고 있다. 동물원 직원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관람객을 유치한 아사히야마 동물원처럼 우치동물원도 정유년 새해에는 경관물임형(Landscape-Immersion·자연생태에서 생활하는 동물을 관람하는 것) 전시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社說

여전히 납득할 수 없는 ‘세월호 7시간’ 행적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1000일이 지나서야 당시 자신의 ‘7시간 행적’을 얼굴을 드러내고 있다. 거대 재벌 기업의 총수들도 하루가 멀다고 언론에 등장한다. 온갖 권력과 특혜를 누리던 그들은 그러나 하나같이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만 되풀이하며 국민을 상대로 줄다리를 하고 있다. 그런 그들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지금 한국은 안팎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국내 정치는 멈춰 있고 경제는 악화 일로다. 일본·중국·미국에 치어 외교적으로도 고립무원이다. 그런데도 이 위기를 앞장서 헤쳐 가야 할 권력자·엘리트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촛불을 든 국민은 지금 그들에게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누려 온 것을 용인해 준 국민에게 진실을 보여 줄 것을, 나라를 올바르게 세우는 데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선거 연령 18세 하향 조정 이번이 좋은 기회다

선거 연령을 현행 만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선거법 심사소위에서 의결됐다. 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도 만장일치로 찬성 의견을 냈다고 한다.

앞으로 안행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등 거쳐야 할 관문이 많지만 입법을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세계적인 추세로 보더라도 선거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34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33개국 중 가운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33개국의 선거 연령은 모두 18세 이하다. 오스트리아 등 일부 유럽 지역에서는 16세 이상부터 투표가 가능한 곳도 있을 정도다. 유일하게 우리나라보다 선거 연령이 높았던 일본도 지난해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거의 모든 나라가 18세 이상을 성인

으로 보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가입돼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1조 역시 아동(Child)의 개념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주민등록증의 경우 17세 때부터 발급해 주고, 민법상 결혼도 18세부터 가능하며 병역 의무도 18세부터 지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선거 연령 하향 문제가 번번이 우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여야간에 엇갈리는 정치적 이해득실 때문이었다. 청년층 지지도에서 우위를 보이는 야권에서는 만졌지만 보수 여당에서는 이를 공론화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로 여론이 궁지에 몰리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까지 가세하면서 선거 연령 하향 조정을 위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제 정치권은 보다 많은 청년들의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번만큼은 반드시 선거 연령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아라비안나이트란 이름으로 잘 알려진 ‘천일야화’는 1001일 동안의 이야기를 아랍어로 기록한 설화다. 신드바드의 모험,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등이 천일야화 속에 담긴 대표적인 이야기다.

천일야화는 죽음의 위기에 처한 공주가 생선을 위해 흠미진진한 이야기보따리를 풀어 놓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페르시아의 왕 사리아르는 어느 날 왕비가 노예와 희롱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격분해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을 살해했다. 그 후 왕

은 세상의 여자들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됐고 미인을 하룻밤

에 한 명씩 아내로 맞아 다음날 아침이면 사형에 처하기로 했다. 딸을 가진 부모들은 공포에 떨었고 잔학을 피해 국외로 도망가는 사람이 속출했다. 그러던 중 세헤라자드라는 재상의 딸이 불려가게 됐다. 세헤라자드는 지혜를 발휘해 왕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말했고 탁월한 말솜씨로 이야기보따리를 풀어 나갔다.

흠미진진한 이야기는 밤새도록 이어졌고 결말이 나기 전에 날이 밝아 결국 무사히 하루를 넘기게 됐다. 이런 식으

로 1001일 동안 이야기를 풀어 나가자 결국은 왕도 탄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선정을 베풀게 됐다.

어제(10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정확히 1001일이 됐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희생자와 유가족은 물론 국민 모두가 아픈 사연을 안고 살고 있다. 배안에 갇힌 채 바닷속으로 가리앉으면서 희생자들이 가족과 친구들에게 보낸 무수한 절망의 문자들, 자식들을 영결하고 격분해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을 살해했다. 그 후 왕

는 세상의 여자들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됐고 미인을 하룻밤에 한 명씩 아내로 맞아 다음날 아침이면 사형에 처하기로 했다.

딸을 가진 부모들은 공포에 떨었고 잔학을 피해 국외로 도망가는 사람이 속출했다. 그러던 중 세헤라자드라는 재상의 딸이 불려가게 됐다. 세헤라자드는 지혜를 발휘해 왕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말했고 탁월한 말솜씨로 이야기보따리를 풀어 나갔다. 흠미진진한 이야기는 밤새도록 이어졌고 결말이 나기 전에 날이 밝아 결국 무사히 하루를 넘기게 됐다. 이런 식으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창·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 화 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서울 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우투로 발행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